

행정학

1. 출제영역분석

총론	6	재무행정론	2
정책론	3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1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4	지방자치론	3

2.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7	기출변형 문제	2	신유형 문제	1
-------	----	---------	---	--------	---

3.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짜맞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8	2	2	2	—	1	5

| 내용분류 |

01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 ①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②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③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④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해설】 ① [O] 로위는 정치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강제력의 행사방법(직접 vs 간접)과 강제력의 적용대상(개별 vs 환경)을 기준으로 정책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중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재분배정책이다.

summary | 로위의 정책유형

		강제력의 적용영역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강제력의 행사방법	간접적	분배정책	구성정책
	직접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참고】 2020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190

▶ ①

02 다음 중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 ㄴ.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 ㄷ. 수수료 감면을 위한 주민의 조례 개정 청구
- ㄹ.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주민투표

- ① $\neg$, $\sqsubset$
② $\neg$, $\sqcup$, $\sqsubset$
③ $\sqcup$, $\sqsubset$, $\sqcap$
④ $\neg$, $\sqcup$, $\sqsubset$, $\sqcap$

【해설】 ㄱ [O]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
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O]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ㄷ [O]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개정 청구를 할 수 없다.

2.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ㄴ [O] 지방공무원의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없다.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참고】 2020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847~856

► ④

| 말 바꾸기 + 개념 문제 |

03 다음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 체제를 선호한다.
- ㄴ.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 ㄷ.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한다.
- ㄹ. 행정관리의 이념으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 ㅁ. 집권적 계층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 ① $\neg$, $\exists$
② $\neg$, $\forall$, $\exists$
③ $\forall$, $\exists$, $\neg$
④ $\forall$, $\exists$, $\neg$

- 【해설】 ㄷ [X]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하는 것은 전통적 관료제의 특징이다. 신공공관리론은 투입이 아닌 산출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와 연계한 예산배분을 특징으로 한다.
- ㄹ [X] 신공공관리론은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대응성을 확보한다. 계층 제적 책임 확보는 전통적 관료제의 특징이다.

▶ 올바른 지문

- ㄷ. 산출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와 연계하여 예산을 배분한다.
- ㄹ. 권한분산과 하부위임을 통해 행정의 참여적 대응성을 확보한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155~158

▶ ②

| 법령 문제 |

04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직군분류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 ②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④ 임용권자는 지역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해설】 ① [O] 전문경력관 직위와 같이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직군분류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② [O] 인사혁신처장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동법 제32조의2 【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X]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3년(파면처분의 경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동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O] 임용권자는 지역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 기간을 3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동법 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478, 582

▶ ③

05 신제도주의의 주요 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며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하여 권력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본다.

- 【해설】 ① [X]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개인은 합리적이며 자기이익을 추구하고, 개인의 선호는 선형적으로 제도와 무관하게 주어져 고정되어 있는 것(외생적 선호)으로 가정한다.
- ② [X]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③ [O]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계급구조와 같은 거시 변수나 개인의 선호와 같은 미시적 변수가 아닌 중간수준의 제도적 변수 등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
- ④ [X] 사회적 딜레마(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제도를 인식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며 선호는 선형적으로 주어져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하여 권력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춘다.
-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본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143~148

▶ ③

06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딩(Vedung)은 정책 도구를 규제적 도구(sticks), 유인적 도구(carrots), 정보적 도구(sermons) 등으로 유형화한다.
- ② 권위(authority)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은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적합한 수단이다.
- ③ 정책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④ 살라몬(Salamon)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체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 【해설】 ① [O] 비딩(Vedung)은 정책도구를 정부가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활용하는 기법으로 정의하고, 에치오니(Etzioni)의 권력분류에 근거하여, 규제적 도구(sticks, 채찍), 유인적 도구(carrots, 당근), 정보적 도구(spears, 정보 제공)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 ② [O] 권위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은 명령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규제정책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위기 시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 ③ [O] 행정수단 선택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이념은 행정수단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 ④ [X] 일반적으로 공적 보험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보험으로 직접성이 높은 정책도구이지만, 공공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공적 보험은 간접적인 정책도구에 해당한다.

▶ 올바른 지문

- ④ 살라몬(Salamon)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체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정책수단이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64

▶ ④

| 짝찾기 |

07 다음 중 예산 원칙의 예외를 옳게 짝 지은 것은?

한정성 원칙

- ① 목적세
- ② 예비비
- ③ 이용과 전용
- ④ 계속비

단일성 원칙

- 특별회계
- 목적세
- 수입대체경비
- 기금

【해설】 ④ [O] (한정성 원칙 예외 - 계속비, 단일성 원칙의 예외 - 기금)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는 이용과 전용(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예외),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계상된 금액 내 집행 원칙의 예외), 이월과 계속비(회계연도 독립원칙 예외) 등이 있다.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는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등이 있다.

summary | 예산원칙과 예외

원칙	내용	예외
공개성의 원칙	국민들에게 공개!	국가정보원 예산 등
명확성(명료성)의 원칙	이해하기 쉽고 단순·명확해야!	총액계상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미리 국회가 의결!	전용, 사고이월, 준예산, 긴급명령, 선결처분
정확성(엄밀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이 일치!	적자 or 불용액의 발생
한정성(한계성)의 원칙	① 목적 외 사용금지	이용과 전용
	② 계상된 금액 내 집행(초과지출금지)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③ 회계연도 독립	이월, 계속비
단일성의 원칙	가급적 단일회계 내에 정리!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통일성의 원칙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금지!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완전성(예산총계 주의)의 원칙	모든 세입·세출이 나열되어야!	전대차관, 순계예산, 수입대체경비, 기금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603

▶ ④

| 말 바꾸기 + 개념 문제 |

08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먼(Simon)의 실질적(substantive) 합리성은 행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 ② 디징(Diesing)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진화론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 ③ 기술적 합리성은 일정한 수단이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시키는가, 즉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 ④ 사이먼(Simon)은 인간이 실질적 합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① [O] 사이먼(Simon)의 실질적 합리성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 수단의 선택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행위자는 합리적 선택을 위한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② [X] 디징은 합리성을 기술적(technical), 경제적(economic), 법적(legal), 사회적

(social), 정치적(political) 합리성으로 분류하였다.

- ③ [O] 기술적 합리성은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합리성을 말하는 것으로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말한다.
- ④ [O] 사이먼은 인간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 대안을 선택하려는 실질적 합리성은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게 됨을 증명하였다.

▶ 올바른 지문

- ② 디징(Diesing)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101, 102

▶ ②

| 말 바꾸기 + 개념 문제 |

09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мок(Dimok)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며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 ② 프레데릭슨(Frederickson)과 왈도(Waldo) 등 신행정학의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가치로 주목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③ 롤즈(Rawls)가 제시한 정의론의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로 나뉜다.
- ④ 슈버트(Schubert)는 공익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 【해설】
- ① [O] 디мок(Dimock)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금전적 효율관을 비판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 ② [O]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프레드릭슨, 왈도 등)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 ③ [O] 롤즈(Rawls)의 정의론에서 제2원리인 차등조정 원리는 다시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로 나뉜다.
 - ④ [X] 슈버트(Schubert)는 공익의 과정설적 입장을 취한 학자이다.

▶ 올바른 지문

- ④ 슈버트는 공익과정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93, 95, 103

▶ ④

| 말 바꾸기 |

10 미국 행정의 발달과정과 행정학의 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잭슨(Jackson)이 도입한 업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약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후퇴 및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 ②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가 지배했다.
- ③ 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The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절약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 ④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Appleby)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 【해설】 ① [X] 잭슨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시켰으나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성 문제를 초래하였다.
- ② [X] 건국 직후 미국 정치 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제퍼슨-잭슨 철학이 지배했다.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라는 작은 정부 철학이 있었고, 아마추어리즘과 공직 순환이 행정을 지배해 왔다.
- ④ [X] 애플비(Appleby)가 아닌 굿노(Goodnow)가 주장한 내용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잭슨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시켰으나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 ②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퍼슨-잭슨(Jeffersonianism-Jacksonianism)주의가 지배했다.
- ④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굿노(Goodnow)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117~120



| 말 바꾸기 |

11 실적주의(meri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적주의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②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의 한계이다.
- ③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④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 【해설】 ① [X] 실적주의의 도입으로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은 강화되었다.
- ② [O] 실적주의는 공직 취임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③ [O]미국은 1883년 연방공무원법인 펜들턴법(Pendleton Civil Service Act)의 제정을 통해 독립적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칙을 포함한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확립하였다.
- ④ [O]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 등 신분 보장을 받는다.

▶ 올바른 지문

- ① 실적주의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365~368



1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론은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본다.
- ② 엘더퍼(Alderfer)의 EDG 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를 만족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다.
- ④ 포터와 롤러(Porter&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성취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 【해설】**
- ① [X]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에서는 욕구의 후진적·퇴행적 진행을 고려하지 못한다. 즉, 욕구는 순차적으로 유발되는 것이지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 것은 엘더퍼이다.
 - ② [O] 엘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욕구의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였다. 즉, 성장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인간은 성장 욕구 대신에 욕구계층상 하위욕구인 대인관계 유지 욕구를 더 중요시하여 만족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 ③ [X] 허즈버그의 욕구충족 이원론에서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는 위생요인이다.
 - ④ [X] 포터(Porter)와 롤러(Lawler)는 성과(직무성취수준)가 만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 기대이론을 정립하였다.

▶ 올바른 지문

- ① 엘더퍼의 ERG 이론은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본다.
- ③ 허즈버그의 욕구충족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를 위생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다.
- ④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 이론은 성과가 구성원의 만족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395~405

▶ ②

13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ㄴ. 검사
- ㄷ.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 ㄹ. 도지사의 비서
- ㅁ. 국가정보원의 직원

-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 【해설】**
- ㄴ, ㄷ, ㅁ [O]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 ㄱ [X]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 ㄹ [X] 도지사의 비서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476

▶ ④

1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 ③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대립형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④ 기관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해설】 ① [X]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대립형이며, 집행권을 가진 집행기관의 수장이 집행업무에 관한 실질적 책임자일 뿐 아니라, 의회와의 관계에서 지도자적 지위에 있는 강수장-의회형을 채택하고 있다.
- ② [X] 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지방의회만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 ③ [X]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통합형이다.
- ④ [O] 기관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① 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간선으로 선출한다.
- ③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통합형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827~830

▶ ④

15 공직자윤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립대학교의 학장은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 ②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 당시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5천만 원이다.
- ④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재산변동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해설】 ① [X] 국립대학교의 학장은 등록의무자에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 ② [O]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선물의 가액】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③ [X]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X] 공직자윤리법 제6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 【변동사항 신고】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국립대학교의 학장은 재산 등록의무가 있다.
- ③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상한가액은 5천만 원이다.
- ④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재산변동을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557~561

▶ ②

| 개념 문제 |

16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려는 무사안일의 경향을 가진다.
- ②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 ③ 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 직원을 충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④ 브레넌과 뷰캐넌(Brennan&Buchanan)의 리바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처럼,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해설】 ① [X] 파킨슨의 법칙 제2공리인 업무배증 법칙에 따르면,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아도 보고, 승인 등 파생적인 업무가 증가한다.
 ② [O]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 수가 업무량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③ [O] 파킨슨 법칙 제1공리인 부하배증의 법칙에 따르면, 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 직원을 충원받기를 원한다.
 ④ [O] 리바이어던 가설'은 브레넌(Brennan, H. G.)과 뷰캐넌(Buchanan, J. M.)이 제시한 것으로 공공지출에 대한 통제권한이 집중화될 경우 정치인과 관료들과 특수이익집단들의 선호가 재정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규모가 과도하게 팽창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정부팽창론을 주장하는 파킨슨의 법칙과 맥락을 같이 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의 증가 없이도, 파생적인 업무량이 증가하는 업무 배증의 경향을 가진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72

▶ ①

1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2011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해설】 ① [O]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O] 동법 제39조 제5항

동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X]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의무화되었다.

④ [O] 동법 제39조 제4항

동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③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710~713

▶ ③

18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① [O] 전자정부법 제76조 제1항

전자정부법 제76조 【벌칙】 ①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O]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③ [X] 동법 제5조의2 제1항

동법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 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O] 동법 제24조 제1항

동법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③ 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731~732

▶ ③

| 짝찾기 + 개념 문제 |

19 ㉠, ㉡에 해당하는 권력모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 (㉠)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 엘리트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들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 (㉡)은 정치권력에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

(㉡)

- ① 밀즈의 지위접근법
- ② 밀즈의 지위접근법
- ③ 헌터의 명성접근법
- ④ 헌터의 명성접근법

- 달의 다원주의론
-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 달의 다원주의론
-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해설】 ③ [O] ㉠ (Hunter의 명성접근법)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연구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명성 엘리트들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담배연기 자욱한 방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결정은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에 의해 비판 없이 수용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 (달의 다원주의론)은 바흐라흐와 바라츠 등 무의사결정을 주장하는 신엘리트론자들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 받았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200~202

▶ ③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 ②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모형의 유용성이다.
- ③ 단절균형모형을 따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 ④ 다중합리성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 【해설】 ① [X]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며,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 ② [X]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합리모형의 유용성이다.
- ③ [X]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점증주의에 따른 전략이다.
- ④ [O] 다중 합리성 모형은 정부예산의 과정적 접근방법에 근거하여,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으로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 ②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합리모형의 유용성이다.
- ③ 점증모형을 따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637~641

▶ ④